

바람직한 자원순환정책을 기대하며…

우

리나라 폐기물의 총발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종량제 시행 이후 재활용률의 급증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행한 2006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72.3%를 매립처리하고 23.7%만을 재활용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 정책 등에 힘입어 2004년에는 재활용률이 49.2%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 처리율은 36.4%로 낮아지는 등 폐기물처리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하고 남은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83.8%에 이르고 있음에도 주민반대 등으로 인한 소각시설 건설 지연 등으로 소각율은 14.4%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단순 재활용에 중점을 두던 지금까지의 폐기물관리정책을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 강화하고 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운영과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와 같은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안에 반영함으로써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 운영 근거 규정,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폐기까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폐기물관리정책 전환은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장위주의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생산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정책 입안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력 없는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가 어렵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하고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계몽과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선행돼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박자가 유기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때만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강화 정책이 구호성과 일과성에 거치지 않고 진정한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권 · 두 · 언



이 상 호
발행인

